

한국현대사에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

박범종 부경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 자료와 문헌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지속된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운동이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해 18년간 존속했던 박정희 독재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즉, 부마민주항쟁은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한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마민주항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부마민주항쟁 당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정확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유공자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주제어 : 부마민주항쟁, 유신체제, 명예회복, 적절한 보상, 유공자관련법 제정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3A2075531).

** 이 논문은 2021년 10월 7일에 “부마민주항쟁의 진실규명 및 정신계승과 관련자 예우”를 주제로 개최된 10.18민주항쟁연구소·한국정치사회연구소·한국국회학회 추계공동학술회의의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를 종식시킨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2019년 10월 16일 경남대에서 대규모 기념식을 가졌다. 이 기념식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서슬 퍼런 유신독재에 맞서 억눌린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 열망으로 피워낸 뜨거운 민주주의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 6.10 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된 것에 경남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더욱 힘쓰겠다는 취지를 밝혔다¹⁾. 또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10차 개헌안의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항쟁, 6월 항쟁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개정하여 해당기간 외의 피해사례도 배·보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입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18년간 존속했던 박정희체제를 붕괴시키는 촉발요인이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이 있은 후, 10.26사태가 발생했고, 전두환의 12.12군사쿠데타로 인해 또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1979년 10월 16일 부산항쟁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10월18일 마산항쟁(이하 10·18항쟁)은 민중항쟁으로 발전해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부르짖었다(정주신 2019, 6). 더 나아가 부마민주항쟁의 10월 정신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

1) 조민규. 2019. “경남 부마민주항쟁 40주년 첫 국가기념식 가져.” [https://www.presian.com/pages/articles/261377?no=26137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ODKU\(최종검색일: 2021/09/23\)](https://www.presian.com/pages/articles/261377?no=26137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ODKU(최종검색일: 2021/09/23))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무엇보다도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은 모두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사건이었으며, 1987년 6월 전국적인 규모로 이어진 민주항쟁은 이 땅에서 군부독재를 영원히 몰아내었다. 즉,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면면히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화라는 큰 맥락에 있어 부마민주항쟁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성과는 크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지난 40년 동안 잊혀진 역사였으며, 지역의 미미한 사건으로 취급되어 여타 민주화운동들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에 대한 연구 성과에 비교해 보아도 부마민주항쟁의 연구는 대단히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와 성과에 대해 민주화라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 자료와 문헌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그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2019a; 2019b)가 편찬한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 2, 3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역사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부마민주항쟁이 남겨놓은 역사적 과제를 제안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마민주항쟁과 민주화

근대민주주의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시민혁명일 것이다. 200년에서 300년이 흘렀지만 영국에서 발생한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민혁명은 주로 4월혁명, 1980년대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정해구 2018, 12). 하지만 1979년 10월16일~20일 간 발생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기억은 크게 자리잡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부마민주항쟁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정권이 붕괴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979년 12.12 군사 구데타로 인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제도권 야당인 신민당, 재야, 학생운동 등 민중운동세력이 힘의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한국정치연구회 2010, 102).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1960년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을 종식시켰으나, 1961년 5.16 군사구데타에 의해 박정희체제를 출범시켰다. 또한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의해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붕괴시켰지만, 1979년 12.12 군사구데타로 신군부가 등장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발생한 광주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집권을 했다. 이후 1987년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 발표 후, 6월 10일을 정점으로 6월 민주항쟁이 발생했고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의 실패로 인해 노태우정권이 등장했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민주화 변화에 있어 항상 사회운동의 저항과 투쟁이 있었지만, 결과는 지배세력의 변경에 불과했다(김경호 2000, 2). 즉, 민중들이 수없이 권위주의 독재에 대항하고 싸웠지만 매번 반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갔다(김재홍 2018, 85-86).

인류의 역사는 지배와 저항이라는 화두가 자리를 잡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역대왕조와 세력은 영원한 지배를 꿈꾸었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치전략을 모색했다. 반면 민중은 복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존재였으며, 민중의 저항행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러한 저항행위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기도 했지만, 종종 새로운 정치 사회건설을 가져오기도 했다. 해방이후 한국의 역사에서 4.19혁명과 1960~7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항쟁, 90년 대 각 분야의 시민단체 운동, 2000년대 촛불시위 등은 바람직한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데 바탕이 되는 참여형 정치문화를 배양했다(김재홍 2018, 99).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항하여 일어난 매우 중요한 민주화운동의 하나이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시민혁명이며 참여형 정치문화이다.

이러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민주항쟁, 민중항쟁, 도시봉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 민주항쟁이라는 성격 규정이 연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공식적 명칭도 부마민주항쟁으로 통용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성격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은 항쟁의 주요 원인과 정치적 목표, 참여 주체의 성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민주항쟁론은 항쟁의 주체를 대학생, 범시민, 하층시민, 기층민중, 민중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상정하고 있지만, 다수설은 학생이나 시민일반을 주체로 보기 보다는 민중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항쟁의 주체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항쟁론의 대표적인 연구인 부산민주운동사(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423-430)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목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였다. 그리고 주체세력은 조직적인 지도부가 없는 민중적 주체 곧 도시빈민위주의 기층민중에 중간층 시민이 가세한 미조직 대중이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민중항쟁’이 아닌 ‘반독재 민주항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민중항쟁론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입장과 단절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어느 쪽이나 항쟁의 주체는 민중이며 항쟁이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강조한다. 민중항쟁론은

부마민주항쟁을 지도자와 사전 계획없이 룬펜 프롤레타리아적 범주의 하층 시민들이 주도한 자연발생적인 민중의 봉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도시봉기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는 대중 혹은 민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질적이고 상이한 부마민주항쟁의 주체(도시하층민)를 타자로 남겨두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의식적 욕망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마민주항쟁의 성격연구에서 공통된 의견은 민중의 항쟁은 권위주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민주주의 이념이 동력이었다는 점이다. 즉,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의 통치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성스러운 이념적 준거였다(하상복 2020, 170).

2. 선행연구 및 연구경향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연구는 1985년 중반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초기 연구의 대부분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인터뷰를 통한 구술 자료, 증언집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향후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가장 소중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1989)의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산대학교 총학생회(1985)의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10월 부마민중항쟁사』, 민주주의사회연구소(2013)의 『치열했던 기억의 말들을 엮다』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부산편 1,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2019a)의 『마산, 다시 역사를 이야기하다』 부마민주항쟁증언집 마산편 2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2019b)의 『마산, 다시 역사를 이야기하다』 마산편 3편, 전호환(2019)의 『마흔 시월, 민주주의를 노래하다』 10.16부마민주항쟁 부산대학교 증언집, 송기인(2019)의 『부마민주항쟁 구술자료 상세 목록집: 1979 부마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2020)이 편찬한 『2020 부마민주항쟁 구술자료집 1』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자료집은 대체로 부마민주항쟁의 배경이나 원인 그리고 역사적 의미에 대한 심층적 분석보다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홍순권 2010, 5). 특히 부산대학교 총학생회(1985)가 발간한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10월 부마민주항쟁사』는 부마민주항쟁을 보는 시각, 배경, 전개과정, 평가 및 전망을 통한 본격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바탕을 제공한 자료이다. 또한 1987년 조갑제가 발간한 『유고1, 2』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0.26 사건을 다루고 있는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부분적으로 사실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다수 시민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연구는 부마민주항쟁의 성격규정과 배경 그리고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은진(1998)은 부마민주항쟁이 경기에 민감한 노동자층이 계기가 되었으며, 김영삼의 제명과 부산시위 소식의 확산 등을 부마민주항쟁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대학생들이 주동한 점과 시위동조자로 육체적 노동자, 상인, 고교생이 참여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투쟁과 대중투쟁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으로 절정에 달했고,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경호(2000)는 부마민주항쟁의 배경을 대외적으로는 카터의 인권외교와 주한미군 철수론에 의한 국가 간의 긴장관계와 대내적으로는 개발독재에 내재되어 있던 모순들, 그리고 부산과 마산지역의 노동구조와 야당지도자에 대한 탄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주형(2018)은 1979년 말 박정희 정권과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 간 정면충돌의 이면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하고 박정희 정권을 사실상 승인하는 동시에,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을 통해 반대 세력을 응원한 미국의 이중적 정책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YH 사건, 김영삼 총재 제명,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박정희 정권을 승인하고 지지한 미국 지배 국제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근식(2000)은 부마민주항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염원을 표출시킨 사건으로 7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점이며, 군부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사회전체를 민주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원(2006, 420; 2011: 415)은 부마민주항쟁이 대체로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의 일부로 취급되고, 도시하층민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보다는 김영삼 제명이후 나타난 지역주의, 한미갈등과 정치사회 내 균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김원(2006)과 차성환(2014)은 부산과 마산에서 봉기한 부마민주항쟁은 1970년대 후반 도시 하층민의 모순을 드러내는 밑으로의 봉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미리(2021)는 부마민주항쟁은 공권력과 독재정권뿐 아니라 사회전체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았던 도시하층민들이 폭력으로서 자신들의 분노를 보여주었던 시공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는 10월 18일 계엄령 발표 이전까지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지만, 마산의 경우 시위 첫날인 10월 18일부터 도심 시위주도권이 시민에게 넘어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정유경(2011)은 부마민주항쟁은 반정권 활동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던 1970년대 말의 불안정한 권력 구조를 표출시킨 사건이며, 지역사회운동의 기반이 저해된 유신체제 아래에서 지역의 학생, 시민, 노동자 등이 동참한 지역사회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 하상복(2020)은 한국 민주화와 관련해 국가기념일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넘어 역사에 담긴 정치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국가기념일화는 사건의 진실 찾기에 중요한 열쇠이지만 항쟁의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복합적이고 일관되지 않는 사실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Ⅲ.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1. 부마민주항쟁의 발생 원인과 배경

부마민주항쟁의 발생배경에 대해서는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인권정책과 주한미군 철수론에 의한 국가 간의 긴장관계, 국내적으로는 개발독재에 내재되어 있던 국가중심적인 종속적 발전 속에서 민중의 배제, 중

화학공업화에 따른 경제적 모순, 부산과 마산지역의 수출지향적 경공업에서의 노동조건, 장기집권에 따른 체제의 경직성과 부정부패, 김영삼의 탄압에 대한 지역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일어났다고 분석된다(김경호 2000, 3). 이러한 다양한 원인과 배경에 근거해 볼 때,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대규모 민중항쟁으로 확산된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부마민주항쟁의 발생과 배경에 대해서는 김재규의 증언에서 찾을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이 3·15의거 및 4·19혁명과 관련하여 등치되는 대목은 신군부에 의해 일사천리 진행된 10·26사태에 대한 일련의 재판과정에서 나온다. 김재규는 “군법회의 최후진술”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16-20일까지 4일간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민란’이란 보고를 무시하고, “서울에서 4·19와 같은 데모가 일어난다면 내가 발포명령을 내리겠다.”는 폭언을 통해 집권욕을 내비쳤다고 언급했다(정주신 2011, 297; 조갑제 1987b, 56).

둘째, 1970년대 말 사회경제적인 모순구조로 특히 부산지역은 경기하락세와 생활고가 겹쳐 폭발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이었다. 대도시 부산의 지역경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유통 상인과 식당 등 서비스업종 사업자들이 크게 불만을 가진 문제는 정부가 1977년부터 시행한 부가가치세였다. 1970년대 말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제2차 오일쇼크라는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위기와 결합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었으며,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경제적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저임금 노동자를 바탕으로 한 수출지향적 경공업 도시였던 부산과 마산이었다. 정부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자본가, 봉급생활자, 도시 노동자와 농민 등에게 안정화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이러한 부가가치세 도입이 사회적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²⁾ 결국 경제 불안정이 던져주는 부담과 피해는 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가장 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바로 민심동요를 낳는 요

인이며 곧바로 민중봉기 형태의 시민항쟁으로 폭발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245). 이것은 10월16일 부산대 학생과 시민이 가세한 시위가 발생한 후, 10월 17일 부산 현지에 내려가 시위현장을 직접 살펴본 김재규 중앙정보부의 증언에서 나타난다. 그는 부마민주항쟁은 일부 학생운동권 선동이나 불순세력의 개입이 아니며 일반 시민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군사법정 진술에서 밝히고 있다.³⁾

“... 제가 현지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남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일반시민입니다. 그리고 데모양상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먹밥을 주고 또 사이dana 콜라를 갖다 주고 경찰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겨주고 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완전히 의기투합한 사태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의 구호를 보니까,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물가고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작용해서, 경찰서 11개를 불질러버리고, 경찰차량을 10여대 파괴하고 불 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셋째, 1979년 8월,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 들어가 부당폐업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22세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1979년 10월 초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강력히 비판하자, 박정희 정권은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하였다. 또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연행·체포·고문·연금 등의 탄압 속에서 야당과 재야세력의 저항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와 공화당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김영삼과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과 탄압이 직접 도화선이 되어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항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래 증언자의 구술

2) 부마항쟁민주기념재단. http://buma1979.or.kr/new_buma/sub3_1_1.php (최종검색일: 2021/09 /23).

3) 1979년 12월8일 계엄사 보통군법회의 2회공판 김재규 진술. 이 진술은 군법회의 녹음테이프를 정리한 다음 책에 수록돼 있다(김재홍 1994, 153-154).

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가 삼선개헌에서 유신헌법까지 법을 개정하면서 종신 집권을 하려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지도자들을 탄압한 일이 아닐까요? 특히 김영삼 총재 제명사건은 그 분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마산사람들에게 더 분노를 안겨주었던 것 같아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32).

부산, 마산 사람들은 그 때 당시 야당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김영삼 총재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탄압을 받았다는 언론을 봤어요.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탄압을 하니 이쪽 사람들의 감정을 매우 상하게 해 부마항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김영삼 총재 제명에 대한 분노가 더 큰 요인일 거라 생각해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45).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도 많이 올랐고, 경제도 좋지 않았습시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경제가 안 좋았다는 경제불안 관련기사가 많이 나왔고, 특히 결정적인 것은 YS에 대한 정치적 탄압, 그리고 또 마산은 3.15와 4.19 민주혁명의 시발점이고 그런 나름대로의 자긍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69).

특히 당시 부마민주항쟁 현장에서는 ① 유신철폐, 독재타도, 박정희 물러가라. ② 야당탄압 중지, 김영삼총재 제명철회 ③ 부가가치세 철폐 ④ 언론자유 보장하라, 학원자유 보장하라, 학원사찰 중지, 구속학생 석방하라 등의 구호에는 유신체제 철폐 등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사회적 불만이 섞여 있었다. 또한 10월 16일 부산대생 지도그룹인 정광민에 의해 작성된 선언문에도 ① 유신헌법 철폐 ② 안정성장정책과 공평한 소득분배 ③ 학원 사찰 중지 ④ 학도호국단 폐지, ⑤ 언론 집회결사의 완전한 자유와 보장 ⑥ YH 사건에서와 같은 반 기업주의 엄단 ⑦ 전 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중지 등의 7개의 ‘폐정개혁안’이 제시되었다(김원 2006, 430). 결국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비정에 대한 민중봉기 성

격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2. 부마민주항쟁의 전개

1979년 10월 16일 낮부터 자정까지 부산대학생(3,000~3,500명)과 동아대학생(4,000~4,500명) 등 총 7~8천여 명이 일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학교주변과 시내 남포, 광복, 창선동 등지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제명에 불만을 표시하는 소요를 벌였다. 이날 밤 10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동아대학생 3백여 명이 도청에 진입하기 위해 투석전을 전개했고, 1천여 명의 기동경찰관이 출동해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시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파출소가 반파되고 상가가 철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212명이 검거되고 경찰관 6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79년 10월 17일 밤에는 진압 차 나온 경찰차 12대 중 6대가 완전히 전소되었다. 그리고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장갑차를 앞세운 무장군인들이 출동해 주요 관공서 및 언론기관을 접수했다. 이 당시 ① 독재정권 물러가라 ② 언론자유 보장하라 ③ 유신체제 철폐하라 ④ 박준규 물러가라고 하는 구호와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이후 10월 18일 마산에서는 경남대학생 1천여 명의 소요 움직임이 일어났고, 3.15 의거탑에서 1,000여 명이 연좌데모에 들어갔다. 이를 시작으로 극동다방 앞, 히다방(창동 500여명), 불종거리 200명, 가야백화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당시 마산경찰서장은 시민들에게 강제해산을 명령했다. 하지만 오후 6시 30분 경, 남성동에서 부림시장 사이 2Km에 걸쳐 1,000~1,500명으로 추산되는 데모대들이 경찰관과 대치해 투석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300여명(경남대생 56명, 고대 4명, 중앙대생 포함, 여자 40여 명 중 여학생 20명 추정)의 학생들이 연행되었다고 경찰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학생과 청년 2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되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림여관 앞 도로변에 50세로 보이는 노동자가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통통 부은 채 죽어있는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3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에서 10월 20일 새벽 3시 사이 2차 소요가 발생했으며, 부산과 서울 등지의 대학생과 접선해 경남대학과 산업대생을 중심으로 데모가 발생했다. 2차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 총 1,484명의 병력(군인 486명, 부산기동대 158명, 마산기동대 129명, 지·파출소차출 611명)이 투입되었고, 소란자 총 177명(대학생 19명, 고교생 3명, 회사원 19명, 노동자 63명, 무직 56명, 기타 16명 등)이 연행되었다. 당시 데모에 참가한 사람은 1,000명~1,500여 명이며, 단순 구경 군중은 4,000~5,0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자료편찬위원회 1989, 35-64).⁴⁾ 즉 참가군중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고교생과 일반 민간인이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계엄령과 위수령 선포 그리고 공수부대를 위시한 군부대가 투입되면서 종료되었다.

당시 계엄군법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부산 1,058명과 마산 505명 등 총 1,563명이 연행되었으며 그중 학생 37명과 일반인 50명 등 87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2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정해구 2018, 25).

3.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정치적 항거와 사회·경제적 함의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어 18일 마산으로 확산되었고, 20일 부산과 마산에서 위수령이 발동되기까지 지속된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운동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본다.

첫째, 1979년 10월 16일 발생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항쟁의 불길이었다. 이 항쟁은 1960년 4월혁명 이후 19년 만에 일

4) 위의 자료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매일(현 경남신문) 사회부의 남부희 부장과 김현태 기자가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에 제출해 준 것이다. 이 자료들은 각각 경남매일 기자들이 당시 현장을 취재해 직접 작성한 내부보고서, 경찰, 시청 등 관공서에서 입수한 자료이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자료편찬위원회 1989, 35).

어난 대규모 군중의 집합행동이었다. 그리고 4월혁명이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듯이 부마민주항쟁 역시 박정희 정권의 종식을 고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3.15를 포함한 4.19의 역사적 경험들이 19년이 지나 또다시 부마민주항쟁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차성환 2020, 59).

부마항쟁은 말 그대로 유신독재를 혁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틀을 잡았던 하나의 시발점이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 전환점이 되지 않으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박정희가 시해 됐거든요. 그런 뒤에 광주항쟁이 일어났는데, 부마항쟁이 시발점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지금도 알고 있죠(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2019a, 106-107).

마산 3.15가 4.19의 출발점이 됐던 것처럼 부마항쟁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근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456).

3.15와 4월혁명이 일단은 부정선거로부터 촉발되었다면 부마항쟁은 인권탄압과 폭정에 대해서 일어났던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4월혁명보다 더 큰 역사를 바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인간다운 권리를 찾자는 것이고 또 독재에 대해 일어났던 의거였기 때문에 4월혁명보다 더 빼어난 의미를 두어야 되고, 이게 다른 역사적 사건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5.18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351).

둘째,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의 오랜 전통을 가진 부산은 전통적인 학생집단과 종교계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청년집단이 사회운동의 대표 세력이었다(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1998, 394). 이러한 사회운동의 세력들에 의해 반유신독재운동이 주도되었으며, 부마민주항쟁은 지도부의 존재없이 밑으로부터 일반대중의 참여에 의해 확대되었다(김경호 2000, 2).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부산대와 동아대 및 경남대

학생들의 선도적 역할 아래서 노동자, 영세상인,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한 기층 민중에 중산층 시민이 가세하여 주체를 이루었던 것이다(부산 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1998, 428).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이후 처음으로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한국 민주운동사에서 독자적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예전의 방어적 성격, 선전, 폭로적 성격의 운동이 보인 한계를 극복하고 민중들에 의한 적극적 항거로 운동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310).

당시 항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학생하고 노동자죠. 수출자유지역 공단이 활성화 되어 있어 퇴근 시에는 노동자들이 엄청 그쪽을 지나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합류가 되는 거죠. …… 그때 경찰서 앞에서는 학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다시 창동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 상가에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얼굴 찍힐까봐 불 끄라고 돌을 던졌어요. 그런 것은 학생이 아닌 시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선봉대로 이끈 역할을 했지만, 시민들이 많이 합세했어요. 결국은 민중들의 싸움이었다고 봅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749-750).

저도 노동자 입장에서 시위대에 참여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1/5정도밖에 안됐고, 그때는 상당히 늦어가지고 모든 근로자들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퇴근했던 때였기 때문에 거의 80%정도가 그 지역 공단에서 퇴근했던 근로자들이거나 지역에서 상업행위를 하던 일반 시민들이었던 것 같았고, 어렵פות이 일반시민들이 과격한 행동을 할 때 자제시키려는 부류들이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512).

셋째, 1970년대 민주화운동은 학생운동, 재야운동, 종교운동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저항적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유신 반대의 입장에 섰던 민주통일당과 지도체제의 변화에 따라 반 유신투쟁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신민당이 있었다.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기 직전 야당을 포함한 반 유신 도전연합은 최대의 결집을 이루어 내었고 이에 대해 유신체제는 강력한 억압과 통제로 대응하였다. 하지

만 당시 민중은 유신체제 하에서 체제 측의 동원/탈동원 전략과 억압 그리고 반 유신 도전연합의 저항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정치적 저항을 선택한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군부 권위주의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추진하는 결정적인 힘은 민중의 저항에서 나온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은 민심이 폭발한 민중봉기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다수가 가담하거나 시위대에 호응하고 도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주신(2019, 27; 손호철 2006)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의 10.16항쟁이 마산의 10.18항쟁에 동기를 부여하였고,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시위가 자연발생적이고 자발적인 민중저항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로 말하자면 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했으니깐요. 처음에는 호응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날이 밝을 때는 이게 노출되기를 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남성동, 창동 일대와 불종거리에서 과격해지게 되었는데, 불종거리에서 과격해진 큰 원인중 하나가 인근 공사장 자재가 무기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날 상황은 학생에 의해 시작되어 시민의 참여로 진행된 자연발생적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399).

사태를 모르고 학교를 갔는데, 거리가 막혀가지고 버스가 더 이상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차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내렸죠, 내리고 보니 그때 경찰들하고 데모대하고 최루탄도 터지고 코도 메스껍고, 상황이 아수라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책방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뭐 군중들이 경찰들하고 대치가 돼 있고, ‘유신철폐’ ‘독재타도’ 이런 구호가 간간이 들리고 돌도 던지고 그런 성향이었어요. 나도 그 무리에 휩쓸려 가지고 조금은 다녔죠(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615).

넷째, 1979년 10·18항쟁은 교내시위 실패에도 불구하고 10·16항쟁 발발과 더불어 도심시위로 확산되면서 유신철폐와 박정희 정권타도에

불길을 당겼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10·18항쟁이 3·15의거의 정신을 계승하며 일어났다는 관점에서 마산의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 타도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정주신 2019, 6-7). 즉,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유신의 군부독재 아래 부산과 마산(現 창원)의 시민들이 맨몸으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일어나, 독재에 맞선 시민이 40년 전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이다. 즉, 민중탄압의 폭압적 기구로 작용하던 유신정권 붕괴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민중의 이익을 배제하고 민중의 지지가 없는 정권은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의미가 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31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흐름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민심도 흐름 따라 갑니다. 민심을 거슬리는 지도자들은 언젠가는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의 흐름입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396).

3.15, 4.19가 있고 난 뒤에 그 철권정치 아래에 묻혀 있으면서 19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저항운동이 없었거든요. 없었다가 마침 부마항쟁이라고 마산에서 일어나서 그래도 이런 정신이 계승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부마항쟁이 없었더라면 3.15정신마저 깡그리 묻혀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었기 때문에 5.18, 6.10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429).

역사적 교훈으로서는 장기집권은 결국 고인물은 썩는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민심의 이반은 정권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점입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141).

다섯째, 부마민주항쟁에 의한 유신체제의 몰락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신군부의 등장과 5.17계엄 확대조치 및 5.18 광주민주항쟁 등을 거치면서 미완의 항쟁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은 1970년대 운동의 종결인 동시에 참다운 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이었다(김경호 2000, 3-11).

저야 뭐 그때 학생이었고, 학보사 기자였으므로 우리나라 정치가 폭정이라는 것, 유신독재가 잘못된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고, 타도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부산에도 갔던 것이죠. 부산에 가게 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독재에 대한 타도의식,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심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128).

부마항쟁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위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재와 유신으로 표현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으로 인해 한국정치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독재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사건보다도 역사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371).

여러 가지 민주항쟁 사건 중에서 부마항쟁이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 지배 속에서 그와 같은 부마사태가 일어나서 유신체제를 끝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일 이후에 6.10항쟁이 일어나고 촛불항쟁이 이어져 오늘날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235).

IV.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과제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항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1970년대 유신체제의 폭압 속에서 자유와 민주, 정의를 위해 아래로부터 촉발해 유신독재의 붕괴를 이룬 역사적 사건이다(홍순권 2010). 즉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의 종식을 가져온 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연구에 있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부마민주항쟁에서 주역이었던 민중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근거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의 붕괴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해방이후 가장 극단적인 권위주의 통치에 대항해 '민주주의 봄'이라고 불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부마민주항쟁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4.19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군부체제의 종식을 가져온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중대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하상복 2020, 175). 그래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성과 공공성에 의해 확정될 민주주의 운동의 주체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존재와 가치를 재현하는 일이다(하상복 2020, 181).

부마항쟁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광주항쟁 이상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과업을 정부에서 뚜렷하게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에 끌려가서 몇 개월 동안 행방불명 돼가지고 반병신 돼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이 투쟁을 하고 대항을 했던 것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259).

다른 항쟁에 비해 편하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기간이 짧다보니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진상조사와 위상정립을 해나가야 합니다. 조사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공과는 분명히 밝혀내면 좋겠어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226).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을 하고 민주화가 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해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보상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진상조사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반정부시위를 하고 고충을 겪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위해 역사적인 자료도 남겨야 합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310).

둘째. 2019년 9월 17일 국무회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에 대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의회와 부산광역시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이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이라는 제도적 형식에 빠져 항쟁과정에 담겨있는 모든 기억들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목격자들의 증언형식의 문헌과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과 고민들 그리고 그들의 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하상복 2020, 162-165). 왜냐하면 역사란 승리자의 기억이라는 주장처럼 몇몇 중심인물들의 행적만 기록으로 남고, 가장 큰 희생자와 저항집단의 주역이었던 민중의 행위와 삶은 역사의 뒤편길에 묻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enjamin, 1969).

지난 2016년 말 7-8명이 단체로 국가를 상대로 부마항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관에게 부마항쟁 때 억울하게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국가는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당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경우들이 많습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353).

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옛날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처럼 뒤에서 돌봐주실 않거든요. 몸을 다치신 분들도 있고, 또 너 왜 그런 거 해가지고 고생하나? 이렇게 어렵게 사냐? 이런 주변의 시선과 질책 등으로 더 마음 다치신 분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551).

셋째, 헌법재판소는 2019. 4월 11일 ‘2016헌마418’ 전원재판부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51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이 유신독재의 종식

을 가져온 민주화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미만의 구금자는 배상 또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5·18 보상법, 4·3 특별법 등의 보상 관련 법률에서 구금 일수에 제한 없이 관련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등권 위반 소지가 크다.⁵⁾ 또한 사법부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시기 등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는 방식이 사안마다 각기 달랐다. 그 결과 부마항쟁관련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이보형 2021, 467-468). 따라서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률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부마민주항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각골도 적고, 쇠골도 적었던 것 같고 치료를 요합니다’ 라는 진단이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와 다친 장소를 그림을 그려서 아주 상세히 적어서 줬기 때문에 진실된 증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평가는 ‘근거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471).

부마 관련법이 제정되고 나서 관련자들 신청을 받고, 관련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상해를 인정받아 4백팔십만 원을 받아가라고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백몇십만 원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게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탄 사람도 있지만 저는 타지 않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585-586).

넷째, 부마민주항쟁이 무너뜨린 유신체제는 대통령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된 반민주적 정치체제이다(전재호 2018, 129; 하상복 2020, 171). 그래서 당시

5) 윤성효. 2019. “현재 ‘부마항쟁 보상 제한 위험 아냐’ 기념재단 ‘반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688(최종검색일: 2021/9/26.); 류민기. 2019. “현재, 부마항쟁보상법 보상 제한 위험 청구 기각.”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5458>(최종검색일: 2021/9/26).

언론 또한 정부의 꼭두각시 노력을 했고,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폄하하는 보도가 많았다. 이러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정확한 진실을 지금이라도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김원(2006, 419-420)의 지적처럼 언론은 1979년 10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흔히 ‘부마사태’라고 불렀다. 그리고 당시 신문기사는 ① “대학생들 시위로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령, 불순분자 경거망동 발본,” ② “폭동에 가까운 방화·파괴 이틀, 현장에 사제총기 배후에 조직세력 있는 듯,” ③ “복귀, 부산사태왜곡 선동, 유혈참극, 학생학살 등 날조,” ④ “공공건물 파괴 등 18~19 이틀 소요, 마산서장 회견 사제총·각목·화염병 사용” 등의 왜곡된 보도들이 많았다. 즉, 유신체제 아래서 신문,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는 체제에 유리한 편향된 뉴스를 보도했다(정유경 2011, 23).

그렇죠, 말하자면 반민주적인 편파방송 각성하라 이거지요. 명분이 돌을 던졌겠어요? 저녁때 시위는 불 지르고 이러다 보니 파장이 심상찮을 거라고 기자들은 추측을 했어요. 이 정부가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전국적으로 보도는 제대로 안 되고 있었잖아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618).

그때 한번 부마항쟁에 대한 무슨 다큐멘터리를 할 때, 그 때 경남대 여학생이 잡혀갔던 광경을 봤던 것 같아요. 바라는 거는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258).

다섯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4.19 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항쟁과는 달리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도 있지만, 국회사 행정부의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인식과 제도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그 임무는 진정한 진상규명도 아니고 단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항쟁관련자들의 보상에 더 치중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관련자들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당시 공권력 휘둘렀

던 사람들의 반성도 필요하며,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유공자관련법도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정주신 2019, 9).

5.18 같은 다른 민주항쟁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조직화가 덜 되어 있어서 아니면 세력화가 덜 되어 있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정부가 문민화 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으면 정부쪽에서 다른 것보다도 명예적인 부분들은 제대로 회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331).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라, 그 당시 마산경찰서에서 조사계, 정보계에 관여했던 공권력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군 검찰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진심어린 사과,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 그래서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고 휘둘렀던 공권력이 어떻게 한 자아와 인격을 파멸시켰는지를 알아야 해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552).

여섯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기는 했으나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국가기관(경찰, 군대, 정보기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보상법)에서 정해진 진상규명의 시한이 매우 불충분하여 법 개정을 통한 시한의 연장과 조사권한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검찰 기록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피해자)와 관련해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 구금된 시민은 총 1,563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247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부마민주항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정권에 대해 갖는 오래된 피해의식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대다수의 단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차성환 2014).

사실 저는 애당초 부마항쟁 관련해서는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은 기

역이었어요. 그렇게 우연찮게 오영훈씨가 서울서 연락이 몇 번 왔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주소를 알아가지고 집으로 용지가 날아왔어요. 저는 당시로서는 그 뭐 좋은 기억도 아니고, 되도록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외면을 했습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684).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나 같이 증언해 줄 사람들도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사람들의 기억이 더 흐려가기 전에 제발 한 사람이라도 더 증언을 받아서 자료를 남기고, 자료 수집을 광범위하게 해서 항쟁에 관계된 사진 한 장, 말 한마디라도 찾아서 역사의 증거로 남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711).

일곱째,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과거이다. 과연 부마민주항쟁은 무엇인가? 유신체제에서 벌어졌던 단순한 수많은 시위중의 하나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5·18기념재단을 주축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국정치사에서 중요한 민주화라는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연극제, 이런 게 아니라도 무대예술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요즘 학교마다 동아리들이 있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놀 무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기성세대들이 안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현장을 잘 활용하면서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예술로 승화하면 좋겠고, 꽤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니까요. 현장의 예술이 시민에게 실체감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60).

얼마 전 진해루에서 했던 그런 음악회라든가, 그 다음에 나는 거창하게 크게 뭐를 벌리면 힘드니까 좀 자주 그 다음에 부담스럽지 않게 일일 호프집을 해서 옛날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모임을 일 년에 한 네 번 갖는다는 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거우면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하니까요. 여기에 예쁜 부마항쟁 카페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거기 관계있는 책도 갖다놓고, 다른 책도 갖다 놓고 서로 나눠보는 분위기를 만들면 참으로 좋겠네요(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447).

V. 결론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박정희 군부독재에 대한 항거는, 부산의 도심으로 번졌고, 18일에는 마산으로 확산되면서 시민항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서슬 퍼런 유신독재 시기에 부산과 마산의 시민은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18년 군부독재가 무너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마민주항쟁은 10.26 사태가 발생하고 신군부의 구데타로 인해 역사적 의의와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이후 1980년대 5·18광주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속에서 조명 받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다(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430). 또한 3·15의거나 부마민주항쟁은 4·19 혁명이나 10·26사태에 비해 미완의 항쟁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4.19혁명, 5.18 광주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정치에서 권위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온 민주화 운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자료와 문헌자료를 통해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부마민주항쟁이 남겨놓은 역사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부마민주항쟁은 ①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항쟁의 불길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종식을 가져온 민주화 운동이다. ②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한 적극적 항거이다. ③ 부마민주항쟁은 기존의 민주화 운동과는 달리 학생에서 시작된 자연발생적인 민중시위이다. ④ 독재정권 타도의 기폭제 역할을 했으며, 민중의 이익을 배제하고 민중의 지지가 없는 정권은 붕괴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⑤ 유신체제의 종식을 통해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의 출발점을 제공하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이 남겨놓은 역사적 과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유신체제 붕괴에 결정적 영향을 준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되어야 한다. ②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부마민주항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부마민주항쟁 당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당시의 정확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유공자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⑦ 부마민주항쟁 등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부마민주항쟁은 어느 한 지역의 국한된 민주화운동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우리들의 부마”로 기억해야 할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군부독재에 항거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외쳤던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가 결코 가볍게 이룩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 43년을 지나면서 현재의 한국을 있게 한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보존, 계승 발전시키려는 주체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에서,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역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역사는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마민주항쟁을 어떻게 서술하고 해석해야 하는가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역사적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경호. 2000.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의.” 『21세기정치학 회보』 10(1), 1-21.
- 김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2), 419-453.
- 김재홍. 1994. 『박정희살해사건 비공개진술 초록음 (상): 운명의 술 시바 스』 서울: 동아일보사.
- 김재홍. 2018. “2016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1979 부마민주항쟁과의 정치사적 동질성.” 『정치와 평론』 22, 71-123.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13. 『치열했던 기억의 말들을 엮다』.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부산편1,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자료편찬위원회.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 십주년 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마산, 다시 역사를 이야기하다』. 부마민주항쟁증언집 마산편 2, 불후미디어.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마산, 다시 역사를 이야기하다』. 부마민주항쟁증언집 마산편 3, 불후미디어.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0. 『2020 부마민주항쟁 구술사료집 1』. 도서출판: 전망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5.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10월 부마민주항쟁사』. 부산대총학생회.
- 손호철. 2006. “1979년 부마항쟁의 재조명-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서울: 이매진.
- 송기인. 2019. 『부마민주항쟁 구술자료 상세목록집: 1979 부마의 기억과 기록』.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 이보형. 202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비례원칙심사-헌법재판소 2016헌마418 결정을 중심으로-.” 『법조』 제70권 제3호(통권 제747호), 466~500.

- 임미리. 2021. “부마항쟁, 도시하층민들의 해방구: 부마항쟁의 주체 및 성격에 관한 연구.” 『기억과 전망』 여름호(통권 44호), 138-185.
- 전재호. 2016. “유신체제와 부마항쟁.”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총서10: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 도서출판 선인.
- 전호환. 2019. 『마흔 시월, 민주주의를 노래하다』. 10.16부마민주항쟁 부산대학교 증언집, 부산대학교.
- 정근식. 2000. “부마항쟁의 79-80년 레짐.” 지역사회학편, 『정보화와 지역발전』 한울.
- 정유경. 2011. “부산지역의 부마항쟁에 관한 고찰.” 『한국민족문화』 (39), 291-326.
- 정주신. 2019. “마산의 민주화운동 비교 분석: 1960년 3·15의거와 1979년 10·18부마항쟁.”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2호(2019 가을), 5-18.
- 정해구. 2018.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역사비평사.
- 조갑제. 1987. 『유고 1, 2』. 한길사.
- 지주형. “유신 체제 말기의 한미 관계와 정치 위기; 부마민주항쟁과 동상이몽의 정치사회학.” 『기억과 전망』 2018년 여름호(통권 38호), 123-162.
- 차성환. 2014. 『부마민주항쟁과 민중- 항쟁 참여 노동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한국학술정보.
- 차성환. 2020.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4·19의 길’과 ‘5·16의 길’ 사이에서.” 『항도부산』 제40호, 33~65.
- 하상복. 2020. “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그 너머의 상상.” 『동북아연구』 35권 2호, 161-188.
- 한국정치연구회. 2010. 『다시보는 한국 민주화운동: 기원, 과정 그리고 제도』. 도서출판 선인.
- 홍순권. 2010.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제27권, 1-46.

Benjamin, W, Zohn H.(trans.) 1969, Illuminations, Schocken book.

류민기. 2019. ‘현재, 부마항쟁보상법 보상 제한 위한 청구 기각.’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5458>(최종검색일: 2021/9/26.)

부마항쟁민주기념재단. http://buma1979.or.kr/new_buma/sub3_1_1.php(최종검색일: 2021/09/23.).

윤성효. 2019. “현재 ‘부마항쟁 보상 제한 위한 아냐.’... 기념재단 반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688(최종검색일: 2021/9/26.)

조민규. 2019. “경남 부마민주항쟁 40주년 첫 국가기념식 가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1377?no=26137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0DKU (최종검색일: 2021/09/23.)

| |
|--|
| 투고일 : 2021년 11월 10일 . 심사일 : 2021년 11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5일 |
|--|

* 박범중은 부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 발전과 변화! 건국 70년을 읽다』(공저),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지역발전』(공저)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여성의 정치참여”,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도시 구축과 지역발전” 등이 있다.

<Abstract>

The Meaning of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Historical Tasks i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Park, Beom-Jo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Buma Uprising through methods such as oral data and literature research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to suggest future tasks for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was a democratization movement against the Yushin regime that lasted in Busan and Masan from October 16 to 20, 1979. In particular,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led to the collapse of the Park Chung-hee dictatorship regime, which had been in existence for 18 years, when the people emerged as the main body of resistance. And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was the spark between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1980 and the Democratic Uprising in June 1987. In other words,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was the starting point and driving force that broke the chain of military dictatorship and allowed democracy to continue in Korea. Therefore,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should be properly remembered and commemorated in the history of democracy in Korea. Second, we have to properly investigate about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Third, we have to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to those who suffered from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wrong actions of the media at the time of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to report the correct truth. Fifth, the restoration of the honor of those involved i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enactment of the Act on Meritorious Persons. Sixth, we have to secure data o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Seven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ducation programs to inspire historical awareness of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Keywords : Buma Democratic Uprising, Yushin System, Restoration of Honor, Appropriate Compensation, Enactment of the Act on Meritorious Persons